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인식* -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Public Awareness on Methods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 Focusing on the Relevance of Conflict to Democratic Contributions -

가 상 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단독저자)

Abstract

Sangjoon Ka

The purpose of the study aims at examining how citizens' perceptions on positive function of public conflicts and their preferences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are connected, and what factors influence these perceptions. The reason the study attempts to focus on the recognition of the positive function of public conflict and preference for resolution method is that two factors are treated as important areas in public conflict management above all else. To this end, the study investigated citizens' perception of conflict through a conflict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000000 from 2008 to 2020. Likewise, the study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function of conflict and preferred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with the results of the 2010 and the 2020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function of conflict w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conflict in the 2010 survey. However, it found that the evalua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along with the evaluation of the conflict fun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conflict in the 2020 survey. In particular, in both 2010 and 2020 analyses, the study found that trust in the govern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ption of conflict. In addition, it showed that the higher the trust in the government, the people preferred the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to the resolution by the government. It can be expected that if trust in the government is high, conflict resolution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would be preferred, but this was not the case. Citizens link the trust of the government with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arties can play a role, rather than as a method of resolving conflicts.

The study showed that more various variables had an influence on the citizens' perception of conflict in 2020. It is expected that this trend will become stronger. This is

* 이 연구는 2020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because citizens are more seriously aware of conflict than in the past and evaluate that conflict resolution will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But, the study could see the complicated conflict perception of citizens who positively evaluate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conflict resolution. In the future, it was found that a complex and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 conflict perception of citizens. Al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rough connection with a more diverse analysis.

Keywords: public conflict, function of conflict, conflict resolution method, questionnaire survey, trust in government

I. 서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이후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숙의를 통한 갈등해결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비해 최근 공공갈등 연구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토의를 통한 해결책 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점이 나타나는 것은 산적한 공공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정치 불신, 무관심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김주형 201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이후 많은 지방정부들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토의가 전제되는 공론조사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공론조사, 시민참여, 토론을 통한 합의도출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시민사회 성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갈등을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은 공공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논의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의식이 고취되며, 공공갈등이 건설적으로 잘 해결될 경우 집단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박준 2013; 박태순 2010). 특히, 갈등의 발생은 정치적 이질성과 다원성을 증시하는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Gibson 2006) 갈등은 집단 이해관계 속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봐야 하며,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또한, 갈등은 사회관계 속에서 왜곡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한다(박준 2013; 박태순 2006; 2010; Poitras and Renaud 1997). 무엇보다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는 심의 민주주의 발전, 대의 민주주의 한계 극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물론 공공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는 공공갈등을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 문화 즉, 집단의 조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인식도 갈등을 부정적 시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정주진 2010). 이렇듯이 공공갈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한편,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화장장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공공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공갈등 발생의 필연성, 공공갈등 기능에 대한 양면성, 그리고 공공갈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은 공공갈등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공갈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시민들의 공공갈등 인식 관련 연구들은 시민들이 공공갈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가상준 2018; 김진영 2018; 이승모 외 2019; 이선우·이강원 2013; 유희정·이숙중 2016), 또한,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에서 정부 신뢰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졌다(김재신 2011; 김재신 외 2021). 그러나 공공갈등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특징을 볼 때 공공갈등 인식에 대한 조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특히, 공공갈등의 양면성, 발생의 필연성, 해결과정의 어려움, 갈등의 확대 및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순기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공갈등은 시민들의 참여, 숙의를 통한 합의를 통해 해결될 때 민주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시민들은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당사자 간 불평등한 관계 해소,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개입에 의한 해결은 이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과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상충적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이해 당사자 중심의 공공갈등 해결이 대표성과 절차 등에 있어 민주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평가되며 공공갈등의 순기능과 깊게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과연 공공갈등 순기능이 강조하는 민주성, 민주주의 고취는 이해 당사자 중심의 공공갈등 해결과 연계되어 있는 것인가? 즉, 공공갈등 해결에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공갈등의 순기능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순기능에 대한 인식과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선호도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두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공공갈등 순기능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가 무엇보다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갈등 순기능에 대한 인식은 공공갈등의 수용성 및 인내심과 깊은 관

련이 있으며,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는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깊은 관련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 관리차원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의 순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해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하며, 공공갈등 역기능에 중점을 둘수록 이해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정부에 의한 해결을 선호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과연 예상과 같이 시민들은 공공갈등 해결방식과 갈등의 순기능, 즉 민주주의 발전을 연계시키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갈등 인식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식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함께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효과적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기초적 지식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공공갈등 인식에 대한 연구

공공갈등은 환경, 지역,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비선호시설뿐만 아니라 선호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갈등 발생원인, 해결방식,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통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비선호시설 그리고 선호시설을 둘러싼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연구들이다(강재호 외 2005; 길종백 외 2015; 김길수 2004; 박병식·강태호 1998; 백종섭 2002; 안순철 2015; 윤종설·주용환 2014; 전주상 2000; 조성배 2012). 최근 들어 축적된 공공갈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양적연구가 늘어나면서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가상준 외 3명 2009; 권경득·임동진 2017; 신은중 2010; 임동진 2011; 하혜영 2007a; 2007b). 한편, 공공갈등 사례연구 그리고 양적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김재신 2011; 이선우·이강원 2013; 이승모 외 2019). 이는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갈등 관리는 정부의 노력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갈등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공공갈등 인식을 조사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개발연구원(2005년)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연구(2014년)와 같은 일회성 설문조사도 있지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2008년부터 2020년),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2013년부터 2020년), 서울시의

공공갈등 인식조사(2017년부터 2020년), 고려대학교 BK갈등사회교육연구단(2007년, 2010년, 2014년)와 같은 주기적 조사도 이루어지면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위의 조사들은 공통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심각한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가상준 2018;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a; 김재신 외 2021; 유희정·이숙중 2016; 윤인진 2011, 2015; 윤인진 외 5명 2009; 이선우·이강원 2013; 이승모 외 2019; 한국여성개발원 2005). 연도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공갈등에 대한 심각한 인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평가, 공공갈등 발생 빈도, 그리고 개인적 갈등상황 등에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가상준 2018).

한편, 시민들은 공공갈등의 기능(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갈등 기능에 대한 질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선업·윤인진 2009; 유희정·이숙중 2016; 이선우·이강원 2013) 그러나, 과거에 비해 공공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평가는 정부신뢰,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재신 2011; 박태순 2006). 이는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시민 및 이해당사자 참여 기회 확대,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과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해결이라는 점에서 혁신적 시도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는 이루어졌지만 숙의는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었다(차성수·민은주 2006). 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갈등해결 방식의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김주형 2018; 김학린·전형준 2018; 장현주 2020)도 있지만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경험은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비선호시설들이 사회 구성원의 경제·사회생활을 위한 시설 혹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은 커다랗게 변화하였다.

갈등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지만 시민들은 우선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점을 밝히고 있으며(김선업·윤인진 2009; 김재신·가상준 2014; 임동진 2011), 공공갈등 사례 연구들의 결과들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강인호 외 2005; 김도희 2004; 윤종설·주용환 2014; 채경석 2010).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환경 제공 역할하며, 갈등 해결에 있어 조정자 혹은 중재자로서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김선업·윤인진 2009; 이병량 등 2008). 물론 이분법적으로 갈등 이해 당사자에 의한 갈등해결인지 아니면 정부에 의한 갈등해결인지를 정확히 구분하

는 것은 어렵지만 이해 당사자 중심의 갈등해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핵심이라 하겠다. 시민들의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일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김재신·가상준 2014).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정부에 의한 해결을, 반면 일반 신뢰가 높으면 이해 당사자에 의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점은 사회적 안정과 관련이 깊은데 사회 불안정이 심각해지면 정부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지만 갈등상황이 안정적이면 이해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한다는 것이다(김재신·가상준 2014).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한국 공공갈등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이 정치·경제·사회적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국민대통합위원회 2014a; 김재신 외 2021; 유희정·이숙중 2016; 윤인진 2015; 이승모 외 2019), 공공갈등 심각성, 순기능 평가,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이 가능해졌다(김재신 외 2021, 김재신·가상준 2014). 한편,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시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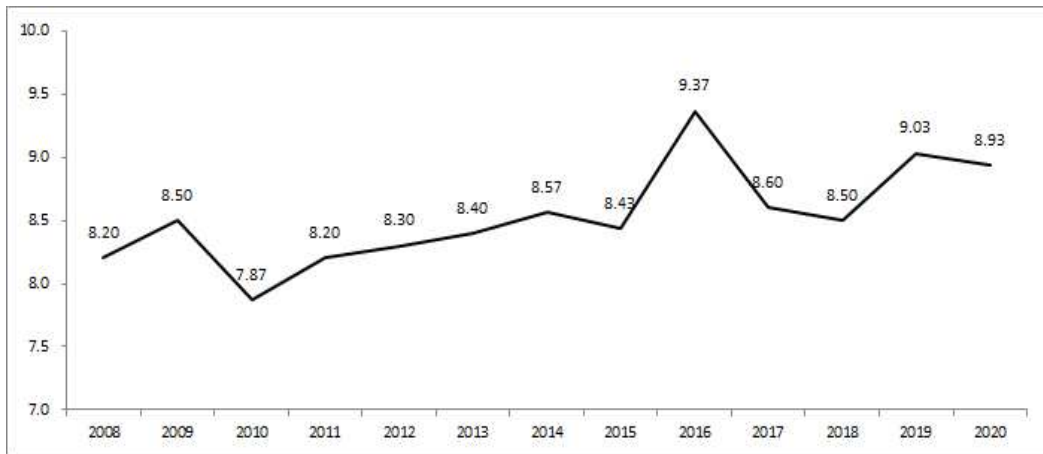
특히, 공공갈등 기능에 대한 평가는 해결과정과 해결방식이 어떠하였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갈등해결 과정이 민주주의 고취, 심의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결방식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가 배제된 갈등관리는 갈등해결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갈등의 재발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갈등의 기능과 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갈등 인식을 알아보고 분석하려고 한다.

Ⅲ. 공공갈등 관련 시민들의 인식

앞서 연구들은 공공갈등의 기능과 해결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별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연계성 및 복합적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특히, 다차원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및 시민단체의 역할, 갈등의 순기능,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갈등에 전반적 인식

그리고 공공갈등 기능 및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먼저 한국 갈등상황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림 1>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의 갈등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13년 동안의 조사 중 2016년도가 갈등이 가장 심각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도가 심각성이 가장 낮은 연도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2016년을 기준으로 갈등상황에 대한 심각성은 이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영향 받은 시민들 간 특히, 당파적 유권자 간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갈등의 심각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그림 1>에서 보듯이 2019년과 2020년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시민들 간 전반적인 갈등의 영향 때문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치권 갈등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지속되었으며, 이는 검찰개혁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갈등상황이 시민들의 2020년 갈등상황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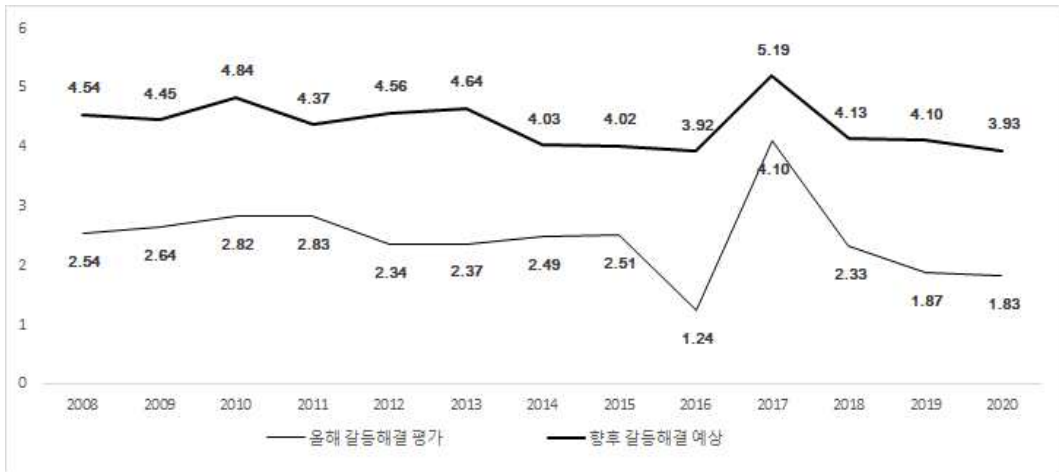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전반적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¹⁾

위 질문과 연계해서 한국의 갈등해결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와 앞으로 갈등해결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두 문항의 연도별 지수 변화를 살펴보았다.²⁾ <그림 2>의 결과에서 보듯이 올해 갈등상

1) 연도별 수치는 “선생님께서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으로 0에 가까울수록 갈등의 심각성은 낮으며 10에 가까울수록 심각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차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이며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평가며 1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항 해결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갈등 해결에 대한 전망적(prospective)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갈등에 대한 두 평가는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6년에 가장 낮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과 함께 이후 긍정적 평가로 전환되었지만 이후 다시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선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이를 통해 2016년 이전과 2017년 이후 한국 갈등상황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 시민들의 갈등해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예상

시민들의 갈등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 즉, 정치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 구체적으로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가상준 2014; 장승진·서정규 2019).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는 정당 간 이념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하며, 정서적 양극화는 당파적 유권자의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정서적 양극화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높은 호감도 반면,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강한 혐오감은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사안에 대한 평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yenger et al. 2019). 이러한 현상은 공공갈등과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갈등의 이념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b).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밀양 송전탑 관련 갈등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념적 성격을 띤 갈등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이 이념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정치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 이념화 현상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

과를 <표 1>이 보여주고 있다.³⁾ 시민들은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2.21%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64.72%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갈등이 이해 당사자들 간 대립일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 간의 이념적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갈등 발생이 이념과 무관함에도 결국에는 이념 대립으로 흘러감으로써 갈등의 강도는 커지고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갈등 이념화 현상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매우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 어느 정도 동의한다
2014	11.1	41.1	31.4	6.1	52.21
2015	11.9	47.1	25.4	5.7	58.98
2016	12.7	42.1	27.4	8.4	54.80
2017	11.1	43.5	29.2	6.7	54.60
2018	14.0	44.2	24.3	8.3	58.20
2019	19.3	43.0	23.3	7.0	62.30
2020	21.1	43.6	23.3	6.4	6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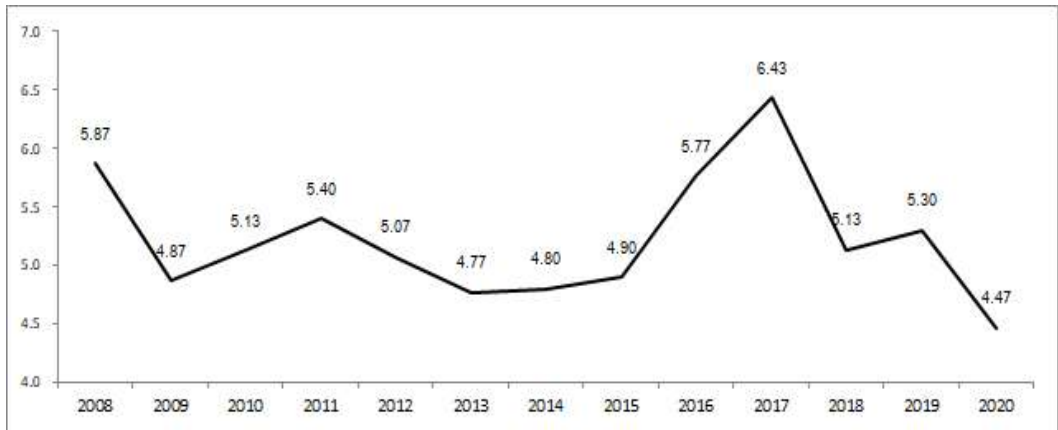
2. 갈등의 순기능과 선호 해결방식

위의 결과들은 시민들의 한국 갈등상황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갈등의 순기능, 즉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갈등해결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갈등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있지만 긍정적 영향력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갈등 해결과정은 참여와 숙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사회의 갈등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하며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시민들이 갈등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⁴⁾ <그림 3>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로 갈등 순기능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으며 매우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갈등상황이 심각하였다고 평가되었던 2016년에도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는 높은

3)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하여 물어보았다.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갈등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편이었으며 2017년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하락하면서 2020년 결과는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에 대한 평가는 <그림 1>의 갈등 심각성 인식보다는 <그림 2>의 갈등 해결정도 평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즉 갈등 순기능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갈등해결이 어렵다는 평가와 깊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갈등의 이념화 현상과도 관련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갈등의 순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결과정에서 참여와 속의가 중요한데 갈등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 없다. 또한, 갈등의 이념화 현상은 갈등의 역기능과 관련된 요인으로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림 3〉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평가 지수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어느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께서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고 응답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 중 택일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번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도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⁶⁾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16년과 같이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때도 있었지만 2011년, 2017년, 2020년과 같이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진 때도 있었다. 이러한 갈등해결방식 선호도는 전반적인 갈등상황,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등과 관련이 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재신·가상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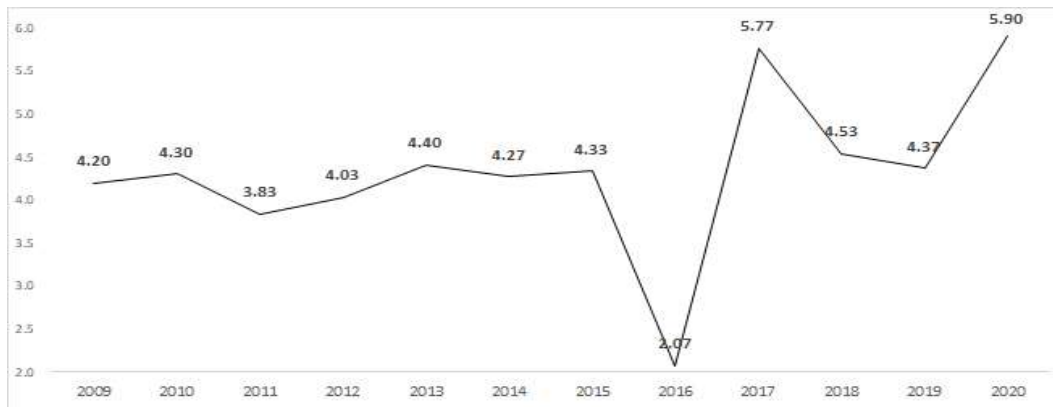
5)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긍정적임을, 0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6) 본 설문 문항은 2010년부터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표 2〉 공공갈등 해결방식 선호도

연도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
2010	41.3	52.5
2011	51.8	47.0
2012	44.9	48.4
2013	46.0	47.0
2014	47.9	52.1
2015	45.9	54.1
2016	41.0	59.0
2017	50.7	49.3
2018	49.3	50.7
2019	45.0	55.0
2020	50.2	49.8

마지막으로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4〉는 이에 대한 연도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6년 절정에 이르렀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였던 2017년 시민들의 평가는 반등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민들의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하락하였다가 2020년 다시 높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그림 2〉의 올해 갈등해결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7) 설문조사에서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며 10에 가까울수록 매우 긍정적 평가를 0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정적 평가를 보여준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한국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갈등 해결에 대한 평가 및 선호도 이와 함께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등 연도별 지표들을 알아보았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이들 지표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들이 거시적 지표들이다보니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시민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그리고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별 인식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통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IV. 공공갈등 인식에 대한 가설 및 통계적 분석

1.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및 가설

앞서 한국 갈등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갈등이 가지는 복잡성, 양면성 등으로 인해 갈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보다는 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갈등 기능과 갈등해결 선호방식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갈등 인식을 파악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연계해 볼 때 앞서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일 것이라 평가하는 시민일수록 당사자 간 갈등해결을 강조할 것이고 반면, 갈등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일수록 정부에 의한 해결을 중시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갈등 기능에 대한 평가는 해결방식에 있어 자율성, 효능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들의 인식이 모두 일률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 설문조사부터 2020년까지 11번의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이를 구분해 살펴보면 <표 3>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⁸⁾ 첫 번째는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유형(I)이며, 두 번째는 갈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하는 유형(II)이다. 이에 비해 세 번째 유형(III)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갈등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마지막 유형(IV)은 갈등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해결방식을 중요시하고 있다.

8)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①매우 부정적이다, ②부정적인 편이다”를 부정적으로 코딩하였고 “③긍정적인 편이다, ④매우 긍정적이다”를 긍정적으로 코딩하였다.

〈표 3〉 갈등 기능과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 교차분석

구분	정부에 의한 해결	당사자 간 해결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I (2,132명)	II (2,176명)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III (2,624명)	IV (3,082명)

위에서 구분된 네 가지 유형은 갈등 기능과 갈등해결 방식에 대해 상이한 의견,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이는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대한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0년 조사와 2020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⁹⁾ 2010년과 2020년 두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2010년과 2020년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2010년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지만 2020년은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2010년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지만 2020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갈등 기능 평가와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 간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앞서 갈등 순기능은 당사자 간 해결, 역기능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보았지만 2010년과 2020년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갈등 기능과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 교차분석: 2010년

구분	정부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계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166	201	367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205	273	478
계	371	474	845

카이제곱 = 0.463(p=0.496)

9) 2010년부터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0년을 포함하였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0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 2010년과 2020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설문조사를 모두 합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응답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질문 및 응답지에 변화가 생기면서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의미가 있는 2010년과 2020년에 대한 분석만 시도하였다. 특히, 2010년은 보수 정부 시절이었고 2020년은 진보정부 시절이라는 점에서 비교 분석의 의미를 가진다.

〈표 5〉 갈등 기능과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 교차분석: 2020년

구분	정부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계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269	249	518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212	237	449
계	481	486	967

카이제곱 = 2.138(p=0.144)

시민들의 상이한 갈등 인식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종속변수는 〈표 3〉에서 보았던 시민들의 갈등 기능에 대한 평가와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 교차분석을 통해 얻은 4가지 유형으로, 시민들은 갈등 민주주의 기여도와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에 있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상이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으로써 시민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 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는 명목척도로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이 필요하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갈등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당사자 간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IV유형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유형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IV유형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를 강조하며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시민들로 갈등의 순기능과 해결에 있어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이다. 이들과 달리 다른 유형의 시민들은 갈등의 기능 혹은 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시민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 대한 비교는 이들의 차이를 불러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시민들의 상이한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갈등 민주주의 기여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혹은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혹은 두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되게 된다. 여기에는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갈등상황 해결에 대한 평가, 정부 신뢰,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평가, 개인갈등 경험, 그리고 이념이 포함된다.¹⁰⁾ 한국사회의 갈등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갈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며,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을 원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갈등상황 해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할 것이다. 한편,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정부에 의한 해결을 선호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평가가 긍정적인

10) 이념 변수의 경우 2010년에는 “①매우 보수적 ②보수적인 편 ③중도적 ④진보적인 편 ⑤매우 진보적”으로 측정하였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물어봄으로써 측정하였다.

수록 정부에 의한 갈등해결을 선호할 것이라 예상해 보았다. 갈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갈등 경험이 많을수록 갈등 기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질 것이며,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정부에 의한 해결을 선호할 것이라 말할 수 있다.¹¹⁾ 이념은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그리고 갈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보적일수록 갈등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정부보다는 당사자 간 해결을 중시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들 변수와 함께 사회, 경제적 배경 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¹²⁾, 그리고 소득¹³⁾ 변수를 포함시켰다. 특히 연령은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강조하는 그리고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정부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학력과 소득 변수도 갈등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방식을 다르게 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력은 갈등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통계적 결과

먼저 <표 6>은 2010년 통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형Ⅳ에 해당하는 시민들과 유형Ⅰ의 시민들은 갈등 인식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 변수는 갈등상황 해결에 대한 평가, 정부 신뢰, 그리고 연령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령은 갈등 인식을 달리하는 시민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의 순기능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Ⅳ유형보다는 다른 유형의 갈등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갈등상황 해결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갈등상황 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첫 번째 유형보다는 네 번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두 번째 유형보다는 네 번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갈등상황이 잘 해결되었다고 평가할수록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당사자 간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정부 신뢰 변수는 두 시민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Ⅰ유형보다는 Ⅳ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정부에 의한 해결을 선호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두 시민을 비교해 보았을

11) 개인적 갈등 경험은 “선생님께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가정, 직장, 또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12) 학력 변수는 2010년 조사에서는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대재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2020년 조사에서는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학교 재학/졸업, ④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⑤대학원 재학/졸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13) 소득 변수는 2010년 조사에서는 ①70만원 이하, ②71~100만원, ③101~150만원, ④151~200만원, ⑤201~250만원, ⑥251~300만원, ⑦301~400만원, ⑧401~500만원, ⑨501만원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2020년 조사에서는 ①100만원 미만, ②100~199만원, ③200~299만원, ④300~399만원, ⑤400~499만원, ⑥500~599만원, ⑦600~699만원, ⑧700~799만원, ⑨800~899만원, ⑩900~999만원, ⑪1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 신뢰가 정부 개입에 대한 선호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 상황 및 제반환경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II유형과 IV유형의 시민을 비교해 분석해 보았을 때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유형은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갈등의 기능에 대해 상이성을 보이는 시민들로 정부 신뢰가 높아질수록 네 번째 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일지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경우 이들의 갈등 인식은 예상과 달리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III유형 시민들과 IV유형 시민들은 연령 외에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를 발견할 수 없다. 두 시민들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로 연령 외에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변수들은 찾을 수 없었다.

〈표 6〉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010년)

변수	IV 유형 기준		
	I/IV	II/IV	III/IV
상수	0.611	1.427	-0.394
성별	0.103	0.174	-0.032
연령	0.033***	0.018*	0.021**
학력	-0.088	-0.066	0.187
소득	-0.027	-0.039	-0.054
이념	0.203	0.092	-0.040
갈등 심각성 인식	-0.122	0.031	-0.259
갈등상황 해결	-0.413**	-0.575***	-0.105
개인 갈등 경험	-0.108	-0.057	0.004
정부 신뢰	-0.729***	-0.576***	0.011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 평가	0.061	-0.125	0.140
N	629		
-2Log likelihood	1634.58		
LR Chi ² (30)	87.745		
Pseudo R ²	0.130		

*p<0.1, **p<0.05,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갈등의 순기능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만 갈등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시민들은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시민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유형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유형 비교를 통해 갈등상황 해결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가질수록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들은 갈등의 순기능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갈등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 결과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정부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해결방식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역할 할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2020년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표 7>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연령 변수와 정부 신뢰 변수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 평가 변수의 통계적 영향력을 찾을 수 있다. 먼저 I 유형/IV 유형 비교를 통해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IV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할수록 IV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갈등의 긍정적 민주주의 기여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갈등해결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연령, 학력, 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상과 다르지 않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념이 보수화될수록 IV 유형보다는 I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IV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2010년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념 변수의 영향력이 2020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갈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이념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좀 더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II/IV 유형 비교는 학력을 제외하고 I/IV 유형 비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갈등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두 시민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비교해 2020년 결과는 정부에 대한 평가가 더욱 더 갈등 인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갈등상황 해결 변수의 영향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2020년의 경우 갈등상황 해결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의해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10년과 비교해 2020년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III 유형/IV 유형 비교에서 발견되는 통계적 변수의 유의성이다. 2010년 분석에서 두 시민들은 연령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많은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성별, 연령, 학력 변수와 함께 개인 갈등 경험 변수, 정부 신뢰 변수, 그리고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 평가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III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IV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개인 갈등 경험이 많을수록,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IV 유형보다는 III 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II 유형과 IV 유형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시민들로 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선호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민들이다. 개인 갈등 경험과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두 시민들을 구분한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다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IV 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신뢰와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평가가 관련성을 보이는 변수이지만 상반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갈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 시민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라 말할 수 있다.

〈표 7〉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2020년)

변수	IV 유형 기준		
	I / IV	II / IV	III / IV
상수	3.163	2.805	-1.231
성별	0.056	0.024	0.592***
연령	0.015*	0.014*	0.015*
학력	-0.397***	-0.168	-0.203*
소득	-0.018	-0.057	0.011
이념	0.125**	0.183***	-0.050
갈등 심각성 인식	0.181	0.181	0.090
갈등상황 해결	-0.193	-0.267	-0.112
개인 갈등 경험	-0.083	-0.110	0.261**
정부 신뢰	-0.926***	-1.093***	-0.423**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 평가	-0.447***	-0.454***	0.279*
N	796		
-2Log likelihood	2199.01		
LR Chi ² (30)	371.424		
Pseudo R ²	0.373		

*p<0.1, **p<0.05, ***p<0.01

전반적으로 2010년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가 발견되는 2020년 결과라 하겠다. 앞서 2010년에는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갈등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갈등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두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갈등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경우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달랐다. 반면, 2020년에는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도 중요하지만 해결방식에 대한 상이한 평가도 시민들의 갈등 인식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0년과 2020년 비교하여 유사점도 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발견되는 것은 10년이 흐르면서 변화된 시민들의 갈등 인식 때문이다. 한국사회 공공갈등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갈등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인지되면서 갈등 기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해결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갈등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 신뢰 변수의 중요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평가 변수의 영향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0년 동안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은 심각해졌으며 갈등상황 해결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매우 하락하였음을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가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가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지만 현재는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와 함께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갈등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반적인 갈등 인식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그림 4>에서 보듯이 갈등상황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변화한 것이다.

VI. 결 론

공공갈등 해결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와 관계가 복잡하게 엮여있고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상충할 때 갈등 해결의 어려움은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해결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많은 공공갈등은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제3자의 개입 특히 정부에 의한 해결이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공공갈등의 원천적 해결 그리고 재발 방지라는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 간 해결이 중요성을 떨 수밖에 없다. 특히,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갈등해결은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이해 당사자 간 해결이 원활하지 않을 때 사안이 난해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제3자의 개입이 요구되는 편이다. 공공갈등이 항상 평화스러운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갈등은 강제적 방법에 의해 종료될 수도 있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적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경우 당사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선호도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공공갈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갈등을 사회 및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갈등 발생이 필연적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갈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 경험을 통해 공공갈등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공갈등이 불러오는 순기능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공공갈등은 점점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다.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한국 시민들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공공갈등 순기능에 대한 인식과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선호도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연계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갈등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갈등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2010년과 2020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갈등의 기능과 갈등해결 선호방식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0년과 2020년 시민들의 갈등 인식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시민들의 갈등에 대한 심각성, 갈등 해결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 2020년 결과는 2010년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또한,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에 대한 평가와 갈등 해결방식 선호도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2010년에는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지만 2020년은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반면, 2010년은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2020년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2010년과 2020년 갈등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0년의 경우 갈등의 기능에 대한 평가가 갈등 인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갈등 기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가 갈등 인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2010년과 2020년에 대한 분석에서 모두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갈등 인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정부 개입에 의한 갈등 해결을 선호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신뢰를 갈등 해결방식으로 연계시키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역할 할 수 있는 제반환경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번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접근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3번의 조사 그리고 갈등의 기능에 대한 설문 문항이 포함된 후 11번의 조사가 있었음에도 좀 더 다양한 연도별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2010년과 2020년에 대해 분석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갈등 인식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10년이 지난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는 점과 갈등 인식이 긍정적이었던 2010년과 부정적으로 변한 2020년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2020년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강해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시민들이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 해결이 점점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갈등 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의 복합적 갈등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시민들의 갈등 인식은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좀 더 다양한 분석과 함께 연계성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가상준·안순철·임재형·김학린. (2009).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51-87.
- 가상준. (2014).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의정논총」, 9(2): 247-272.
- 가상준. (2018). 설문조사를 통해 본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인식: 갈등과 민주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5(3): 109-128.
- 강인호·이계만·안병철. (2005).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공항건설과 외국어고 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137-166.
- 강재호·김상구·조정현·우량호. (2005).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9(2): 61-87.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a).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b).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 권경득·임동진. (2017). 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2): 167-200.
- 길종백·조주은·주인환. (2015). 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 영커버린 실타래 풀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1): 139-159.
- 김길수. (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사례연구: 불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5): 159-184
- 김도희. (2004).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157-188.
- 김선엽·윤인진. (2009). 갈등 의식, 갈등 경험 및 갈등 대처 양식의 일반적 특징. 윤인진·박길성·이명진·김선엽·김철규·정일준 편. 「한국인의 갈등의식」, 39-76.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재신. (2011).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5(2): 1-16.
- 김재신·가상준. (2014).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인식과 영향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8(2): 103-120.
- 김재신·김강민·임재형. (2021). 공공갈등의 심각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2010-2019년 10년 동안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8(1): 101-124.
- 김주형. (2018). 속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회. 「현대정치연구」,

- 11(3): 69-104.
- 김진영. (2018). 제주사회의 공공갈등 인식과 갈등관리 방안 모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조사 연구. 「탐라문화」, 58: 353-385.
- 김학린·전형준. (2018). 국책사업갈등에 있어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4(7): 81-100.
- 박병식·강태호. (1998).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 회보」, 32(4): 239-255.
- 박 준. (2013). 「한국사회 갈등 현 주소」,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발표논문.
- 박태순. (2010). 「갈등해결의 길라잡이: 갈등은 상생을 위한 에너지다」, 서울: 해피스토리.
- 박태순. (2006). 한국사회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해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 리논집」, 2(2): 87-96.
- 백종섭. (2002).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2): 191-216
-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 신은중. (2010). 공공분쟁에서의 조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갈등수준, 분쟁성격, 제3자 개입의 조 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2): 181-203.
- 안순철. (2015).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의와 주민투표: 삼척 원전 건설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 해결연구」, 13(3): 65-94.
- 유희정·이숙중. (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39-80.
- 윤인진. (2015). 한국인의 갈등의식 현황과 변화: 제1~3차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한 국사회」, 16(1): 3-36.
- 윤인진. (2011).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 2007년과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분쟁해결연구」, 9(2): 135-166.
- 윤인진·박길성·이명진·김선엽·김철규·정일준. (2009). 「한국인의 갈등의식: 2007년 한국인의 갈 등의식 조사 결과 분석」,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종설·주용환. (2014). 공공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와 한계: 시화호 개발 사례와 호남선 고속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565-593.
- 이병량·김서용·전영평. (2008).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49-72.
- 이선우·이강원. (2013). 「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 서울: 호두나무.
- 이승모·홍진이·하동현. (2019).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와 특성 분석: 한국인의 공공갈 등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33(4): 145-173.

- 임동진. (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 장승진·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30.
- 장현주. (2020).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성과 대표성: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0(3): 53-84.
- 전주상. (2000).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목동,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275-295
- 정주진. (2010).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은 가능한가?」 서울: 아르케.
- 조성배. (2012).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 구간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2): 128-168.
- 차성수·민은주 (2006).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환경사회연구」, 10(1): 43-70.
- 채경석. (2010).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 24(2): 31-54.
- 한국여성개발원. (2005).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 갈등 해소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하혜영. (2007a).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41(3): 273-296
- 하혜영. (2007b).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329-356
- Gibson, J. L. (2006). Enigmas of Intolerance: Fifty Years after Stouffer's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ies. *Perspectives on Politics*. 4(1): 21-34.
- Iyengar, S., Yphtach L., Matthew, L., Neil, M. & Sean, J. W. (2019).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129-146.
- Lederach, J. P. (2003). *The little Book of conflict transformation Intercourse*, PA: Good Books.
- Poitras, J. & Pierre, R. (1997). 박진·강버들 옮김.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of interests in public disputes. 「협상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갈등조정 ABC」 서울: 굿인포메이션.

접수일(2021년 07월 30일)

수정일(2021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2021년 08월 24일)

〈국문초록〉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인식: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시민들은 공공갈등 순기능에 대한 인식과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선호도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2010년과 2020년 시민의 갈등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의 기능과 갈등 해결 선호방식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0년은 갈등의 기능에 대한 평가가 갈등 인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20년은 갈등 기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다. 특히, 2010년과 2020년에 대한 분석에서 모두 정부신뢰가 갈등 인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해결을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2020년 시민들의 갈등 인식에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시민들의 갈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좀 더 다양한 분석과 함께 연계성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공공갈등, 갈등 기능, 갈등 해결방식, 설문조사, 정부 신뢰

가상준(가상준):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명: The politics of electric utility policy: the role of state institutional actors in designing rate structures and in adopting deregulatory policy innovations) 현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서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 유권자의 특징과 투표선택” 『한국정치학회보』 55집, 2호(2021), “교육감 선거의 특징 분석: 후보자는 이념을 유권자는 정당을” 『연구방법논총』 6권, 1호(2021), “종료방식으로 본 한국의 공공갈등 특징” 『분쟁해결연구』18권 3호(2020) 등이 있다.